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인프라 조성을 선도하는 조경”

2022 - 2026



국토교통부

목 차

I. 계획의 개요	3
II.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성과 평가	6
III. 현황과 여건 변화	8
IV.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20
V.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21
추진전략 I.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강화 ...	21
추진전략 II.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37
추진전략 III.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도 정비	51
추진전략 IV.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	63
VI. 실행계획	72

I. 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 배경과 성격

□ 추진배경 및 법적 근거

- 「조경진흥법」 시행에 따른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필요
 - 「조경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조경분야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필요 (2022~2026년, 전국 17개 시·도)
- 조경분야의 역할 증대와 변화
 -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인한 조경공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조경의 사회적 역할 변화 필요
 - 공원·녹지 등 조경인프라의 기능과 질적 제고에 대한 요구 증대

2. 계획 내용

- 시간적 범위 : 2022 ~ 2026년
- 공간적 범위
 - 전국 17개 시·도 지역, 공공부문(공공의 비용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는 공간)
 - * 민간부문은 본 계획을 통해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고, 조경진흥을 위한 참조와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 내용적 범위 (법적 내용)
 - 「조경진흥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과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조경 분야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전반

[조경진흥법제5조2항]기본계획에 포함할사항

1. 조경분야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2.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조경분야의 부문별 진흥시책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조경분야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조경 관련 기술의 발전·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7. 조경기술자 등 조경분야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8.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조성에 관한 사항
9.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10. 조경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조경의 대상이자 목적인 조경공간의 공공성과 공적 기여 및 역할을 진흥할 수 있는 조경산업 및 법과 제도, 정책에 대한 사항

[조경진흥법제2조(정의)]

1. “조경”이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계획수립 과정과 방법

□ 자료조사 및 분석

○ 현황조사

- (동향분석) 사회 메가트랜드 및 동향조사, 조경산업, 교육 및 연구, 전문인력 현황을 문헌,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등 조사 분석
- (관련 제도 및 정책) 제도 및 관계 부서의 정책을 검토하여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위상과 방향 설정
- (대국민인식조사) 조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 선호도 및 공간복지로서 조경의 역할과 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 전문가 의견수렴

○ 총괄 TFT 자문

- 관련 학계 및 업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공무원 등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도출을 위한 총괄 TFT 구성 및 운영

* 한국조경학회, 한국경관학회,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조경협회, 조경설계업협의회, 환경조경발전재단 등

○ 전문가 인식조사

- 조경 계획 및 설계, 시공 및 관리, 교육 및 연구 및 공공기관 등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별 의견수렴

□ 관계 기관 협의 및 공청회 개최

○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 추진

-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연계사업 검토

○ 공청회

- 국민, 전문가, 관련 학계·협회, 언론기관 등의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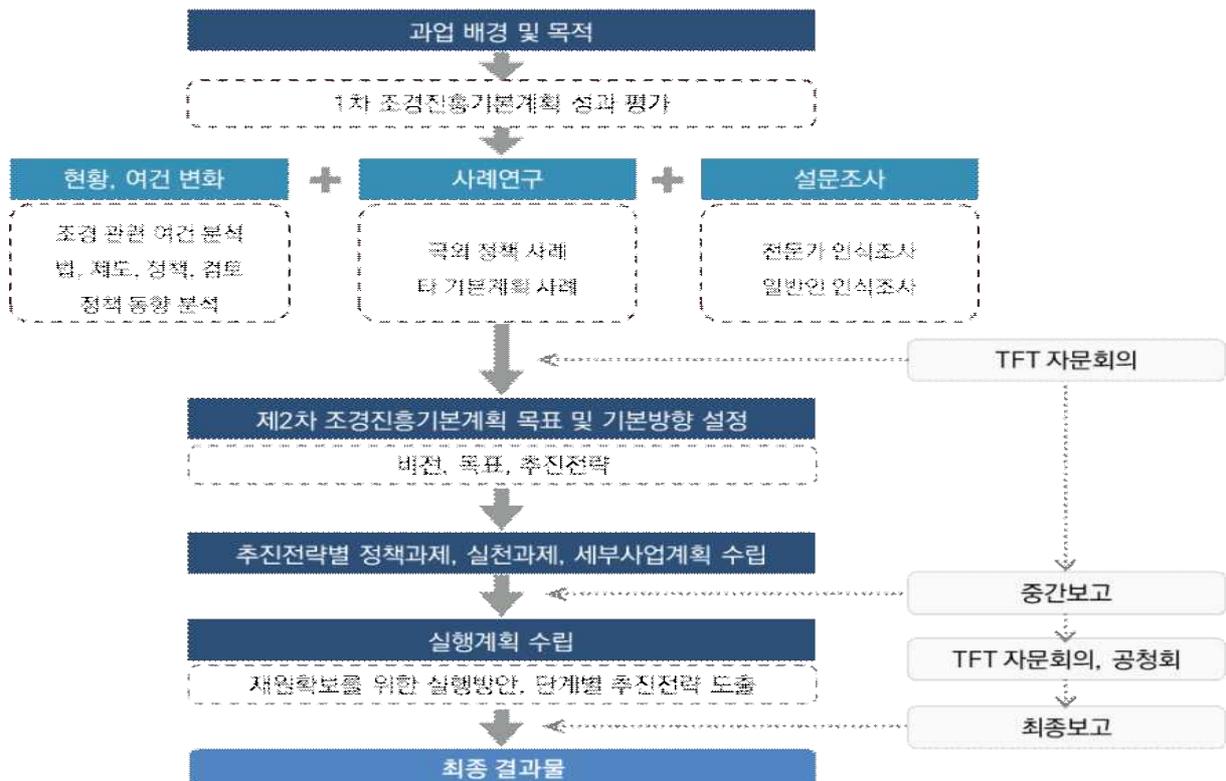


그림 1.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추진과정

II.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성과 평가

1.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 (비전) 건강한 삶, 품격있는 도시 경관,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의 구현
- (목표) 안정적인 조경 분야 기반조성, 국내 조경 경쟁력 강화

2.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 평가

추진전략	정책과제	세부실천과제	사업진행현황			
			진행	일부 진행	추진 예정	미 진행
조경인프라 양적·질적 제고	1. 조경서비스의 양적 확충	1-1.유휴공간 활용/도시재생 연계		●		
		1-2.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원·녹지 확충		●		
		1-3.공원 소외지역 발굴 및 지원 확충		●		
		1-4.대지내 조경, 공개공지 확충		●		
	2.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	2-1. 조경조성 및 유지·관리기반 마련				●
		2-2.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 및 지원		●		
		2-3.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조경정책 추진		●		
조경 산업 및 교육 기반 마련	3. 조경 산업 기반 마련 및 산업 활성화	3-1. 조경지원센터 지정	●			
		3-2. 조경진흥시설·단지 지정				●
		3-3. 산업활용을 위한 통계자료 구축				●
		3-4. 조경설계 적정 대가기준 마련		●		
	4. 조경 교육체계 구축	4-1. 전문인력 대상 교육프로그램 확충				●
		4-2. 산업현장 기반 교육과정 도입				●
조경 인식 개선 및 국제적 위상 제고	5. 조경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	5-1. 조경문화행사 시민참여 확대		●		
		5-2. 일반시민 조경교육프로그램 운영		●		
		5-3. 조경 통합 정보사이트 구축				●
		5-4. 조경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수행				●
	6. 한국 조경 분야의 국제적 위상 제고	6-1. 국제조경학술대회 및 행사 유치			●	
		6-2. 국내외 수교 기념공원 조성 확대		●		
		6-3. 조경자원 연계 관광마케팅 활성화		●		

□ 성과 및 한계

- 2018년 (사)한국조경학회를 제1호 조경지원센터로 지정했으나, 조경지원센터 기능 수행에 필요한 지원 미흡
- 우수 조경시설물 선정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지속적 시행에 어려움

□ 시사점

- 공원녹지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필요
 - 발주 및 감리제도 개선, 설계환경의 공정성 보장, 법률 개정, 행정 체계 보완 등
- 조경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전담조직, 소요 재원 조달방안의 다양화, 구체화 필요
- 조경산업에 중심을 두었던 조경 진흥을 공간 영역으로 확장
 - 조경공간의 진흥 관점으로 다양한 전략 필요
- 실천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면밀한 실행계획 수립 필요
 - 조경산업 통계 구축, 조경진흥시설·단지 지정, 통합정보사이트 구축 등 미이행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 마련
- 다양한 실천과제로 국민 공감대 형성
 - 교류 행사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경공간의 역할 강조
- 「조경진흥법」 및 진흥계획의 실효성 미흡
 - 타 법률과의 관계 속에서 실효성 보완·일부 강제규정 필요

III. 현황과 여건 변화

1. 조경 관련 메가트렌드 변화

□ 사회·문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

-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공간복지로서 조경의 역할 대두
 -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사회적 유대강화
- Covid-19로 인해 안전, 건강, 공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

□ 환경: 기후변화

- 기후변화로 인해 그린 뉴딜사업, 탄소중립선언과 같은 국내 정책의 변화
- 세계 주요 도시의 그린인프라에 대한 인식 증대와 주요 정책의 변화
 - 파리의 '15분 도시', 뉴욕의 '강하고 공정한 도시 만들기(OneNYC 2050)', 로스앤젤레스의 'Green New Deal, 지속가능한 계획 2019'
- 정원도시, 국립공원도시 등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
 - 런던의 민간주도의 국립공원도시 운동, 싱가포르 정원 속 도시 (City in a Garden)
 - 국내에서는 순천 정원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전주 정원도시, 해남 솔라시도 등 정원도시를 표방하는 지방자치단체 증가
- 환경보존과 탄소 배출 저감의 해결책으로서 조경의 역할 증대

□ 과학 · 기술: 4차산업으로의 전환

- 타 산업과 연동한 녹색산업 모색 기회
 - 미디어, 기술, 에너지, 교통 등 각 분야 주요 서비스와 연계된 녹색 혁신 창출
- 온택트의 증가로 새로운 일거리 창출
 -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공간관리, 공간기획 등의 기술 개발 필요
- 데이터 플랫폼 기반 혁신 접목
 - 민관협력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조경분야의 가능성 확장
 - * 민관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수립(2021. 6.11)

□ 경제 · 산업: 도시개발 및 관리방식의 변화

- 국토 차원의 공간전략 수립과 활성화 계획에 조경분야 역할 필요
 -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사업 등
- 도시, 건축, 문화기획 등을 총괄하는 새로운 역할 증대
 - 공간기획, 커뮤니티 계획, 인적네트워크 조직, 마스터플래너 역할 등 새로운 영역에서 조경의 역할 증대

2. 조경 관련 법 체계

□ 조경 관련 법제

- 조경은 조경 대상(토지나 시설물)과 조경 행위(계획 · 설계 · 시공 · 관리), 그 대상과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조절, 통제하는 제도(정책)를 포함하는 개념

○ 조경 관련 법제는 조경 대상인 공간 관련법과 행위인 조경업 관련법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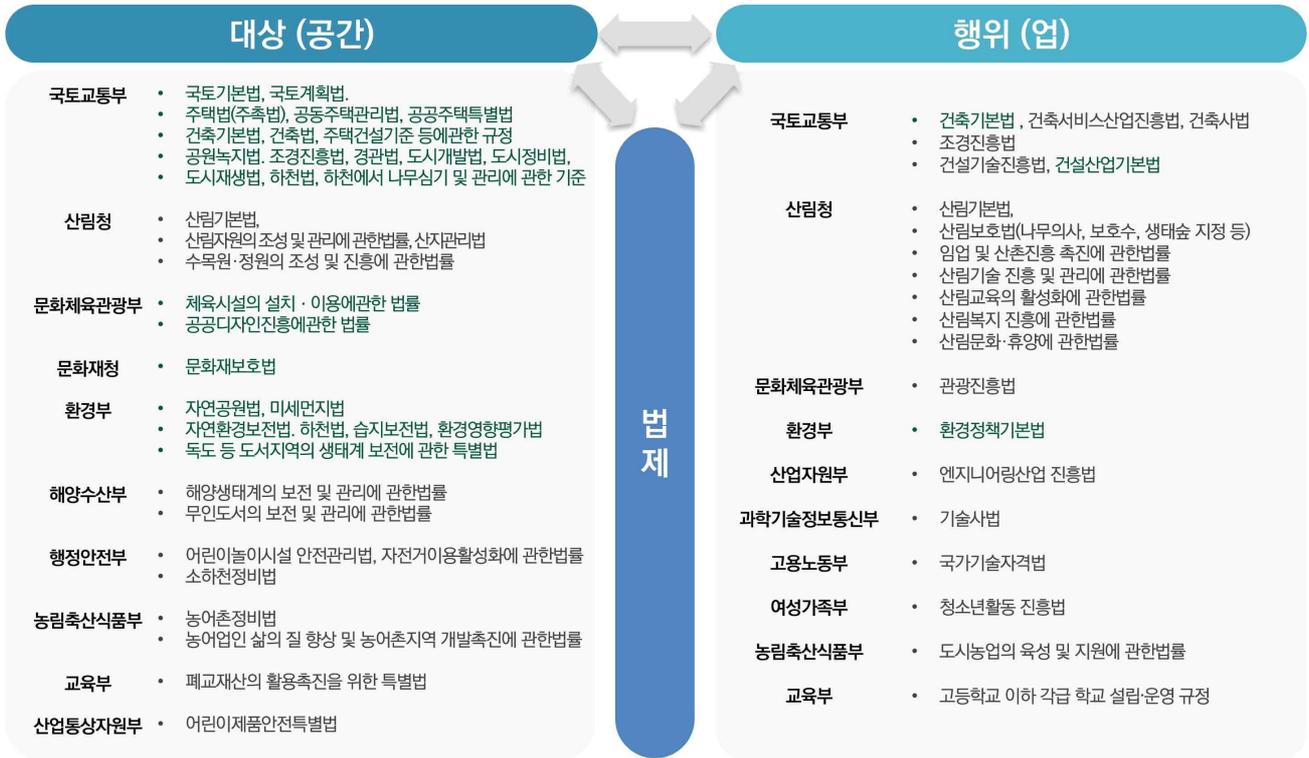


그림 2. 조경 대상과 행위별 관련 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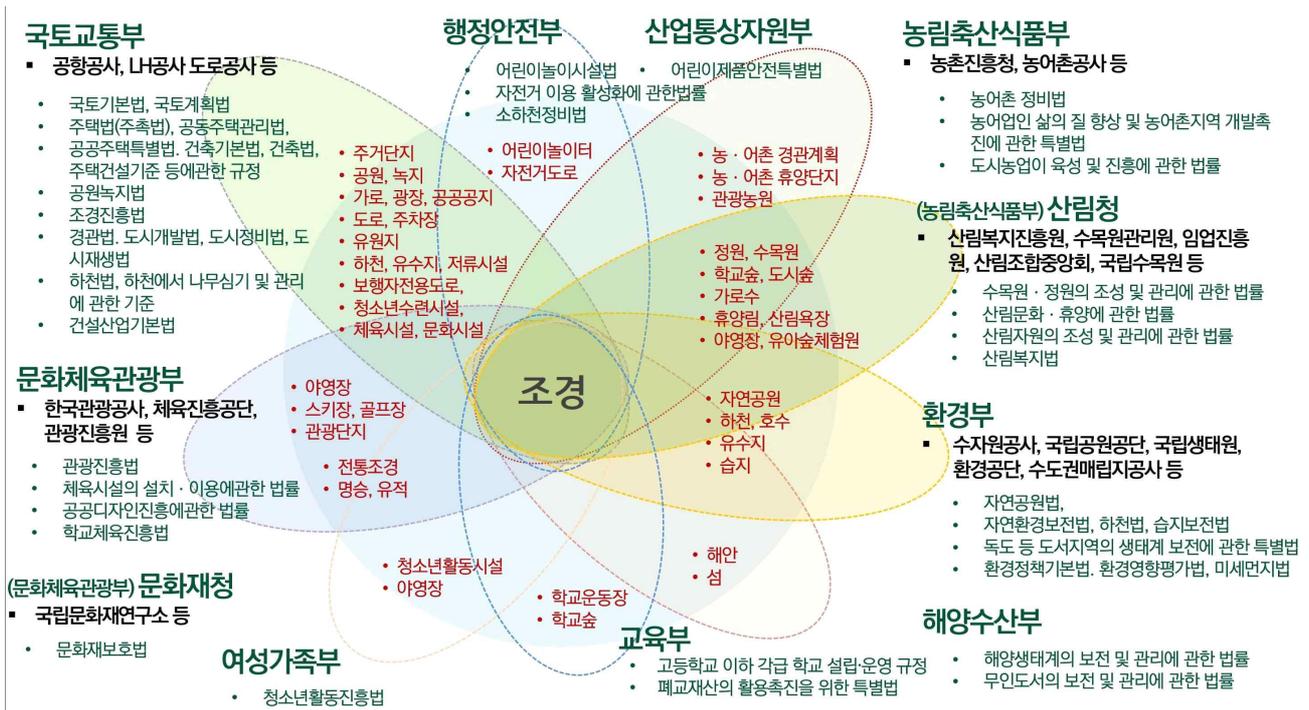


그림 3. 조경 관련 부처별 해당 법제

3. 조경 관련 공간 현황

□ 공간시설 현황

- 도시계획 통계에서 공간시설 중 공원(40%)과 녹지(40%)의 수가 가장 많고, 면적으로는 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공원의 경우 미집행 면적도 많고 비율도 높음
 - 공간시설별 시설 면적에서 미집행 면적의 비율은 공원(24.9%), 유원지(21.0%), 녹지(11.6%), 공공공지(10.9%), 광장(9.2%)의 순임
 - 공원 집행 면적은 524,664,338m², 미집행 면적은 173,948,333m²

□ 공원 수 및 면적

- 2020년 기준 공원 수는 22,254개소에 이르며 공원 유형 중 어린이 공원(10,242개소)이 가장 많음
- 국토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은 69,377ha로 근린공원(52,872ha)이 가장 넓게 분포

□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 공간

- 202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70개 공간 유형 중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여가공간은 식당, 아파트 내 공터, 카페, 생활권 공원 순

* 표본 10,088명, 문화체육관광부

- 생활권 공원(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 4위, 산(국·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포함) 7위
 - 가구 소득이 낮은 경우 아파트 내 공터, 생활권 공원의 이용률이 높음
- 조경공간은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는 공간복지로서 계층과 소득, 거주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

4. 조경산업 현황

□ 조경 관련 사업체 현황(2019년 기준)

- 사업체수는 약 12,160개, 시공(75%), 설계(17%), 운영관리(8%) 순
- 종사자수 약 111,241명, 시공(80%), 설계(10%), 운영관리(6%) 순

□ 조경산업 규모

- 조경산업 매출액(건설공사실적)은 약 8조 1,583억원
- 건설업에서 조경은 약 2.2%
 - 건축 1,655,043억원(65%), 토목 507,349억원(20%), 설비 348,875억원(12.8%), 조경 48,155억원(2.2%)
- 조경산업은 저공해 녹색산업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안정에 기여

□ 조경산업 구조의 문제

- 설계비 산정 및 계약 부문의 제도적 문제 대두
 - 단계별 설계 대가 기준 및 추가 업무, 기간 연장 관련 규정 부족
- 공정한 참여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움
 - 소규모 회사, 신진 조경가 등이 참여할 방안 마련 필요
 -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시공의 질 하락
- 설계와 시공이 연계되지 않아 조경의 질에 대한 책임 소재 모호
 -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설계 의도가 반영되지 않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우려
 - 조경 설계가 시공까지 잘 반영되었는지 감리 가능한 체제 필요

○ 조경공사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품셈 제도 운영

- 조경공사는 다공정 소규모 공사가 많아, 타 대형 공사와 차별화된 품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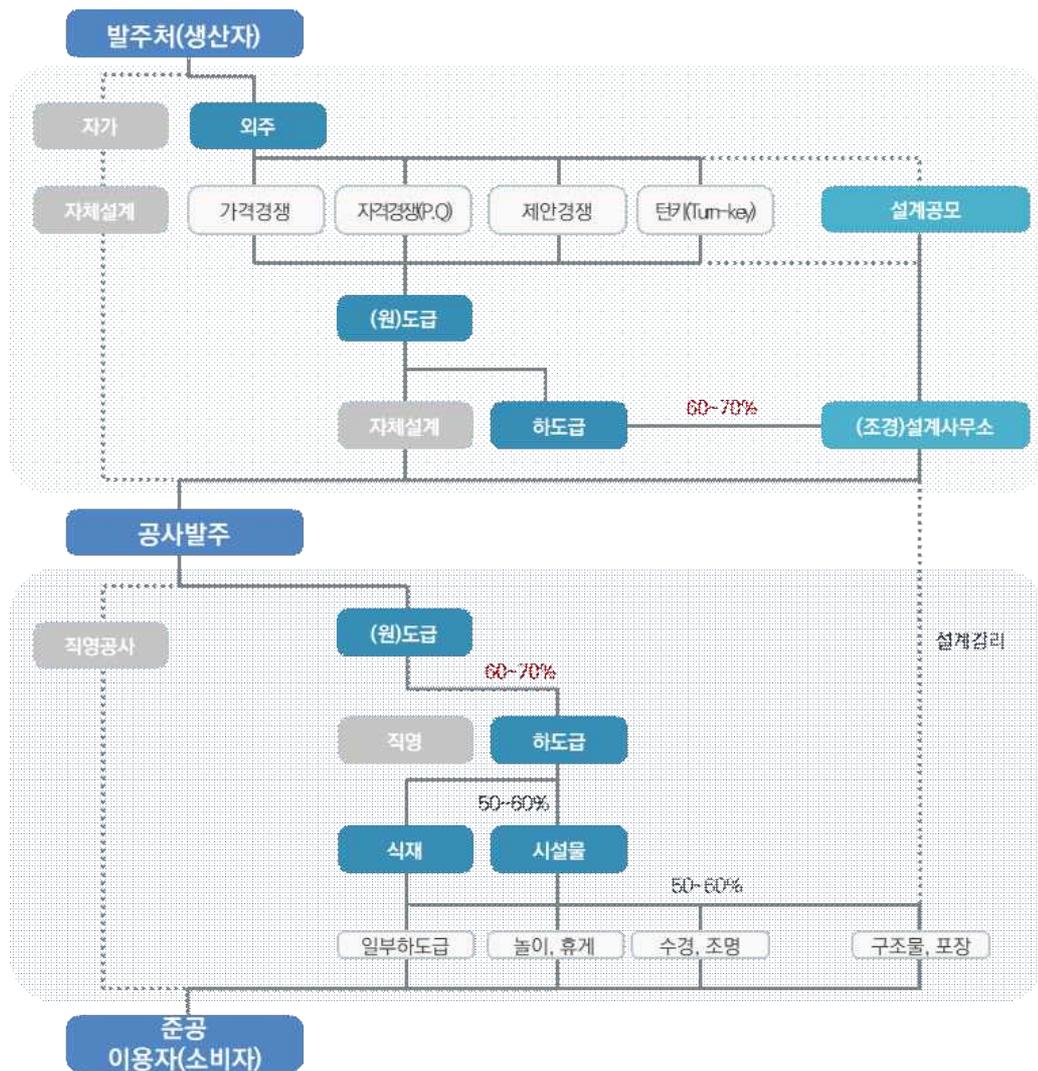


그림 4. 현행 조경산업의 구조 모식도

5. 조경 교육 및 연구 현황

□ 교육 현황(2019년 기준)

- 전국 4년제 대학 53개교, 전문대학 28개교에 조경학과 개설
- 연간 조경 전공 인력 약 1,200명 정도 배출
- 학부 학생수에 비해 대학원 졸업자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양질의 인력 풍부
 - 매년 조경학 4년제 대학 40개 학과, 788명의 졸업자, 대학원 과정은 38개 학과, 119명 졸업자, 전문대학 과정은 18개 학과, 280명의 졸업자 배출

□ 연구 현황

- 농수해양학 하위 조경학 부문 학술지로 우수등재 학술지 1개(한국조경학회지)를 포함해 총 6개 발간
- 연간 약 200편 이상의 논문 발표, 2002년(121편) 대비 2020년 논문(217편) 편수 약 1.8배로 양적 증가
- 기후변화, 그린인프라 관련 연구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기후변화 위기와 녹색 뉴딜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6. 조경 전문인력 현황

□ 국가직 공무원

- 행정 계통의 일원화와 체계화로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효율화 가능성 상승
-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공무원 채용 활성화 계획이 발표된 이후 중앙정부 내 공무원 수 증가추세. 2021년 기준 총 70명의 국가공무원 채용

- 국가직 공무원 중 많은 비율을 산림청에서 선발
- 국토교통부는 조경 관련 주무부처이며, 앞으로 국토환경에서 녹색 공간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국토교통부 내 조경직 공무원의 확대 필요

□ 지방직 공무원

- 지방직 공무원 녹지직렬은 지속적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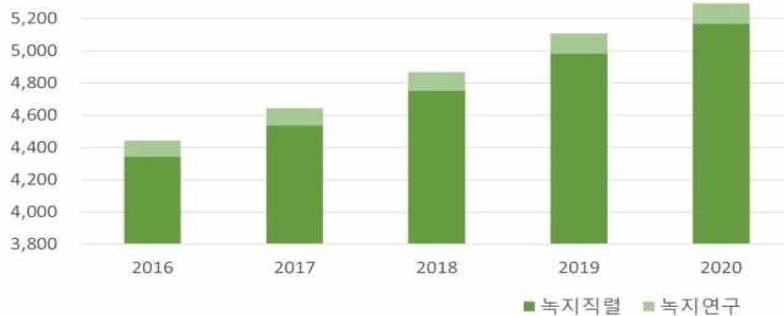


그림 5. 지방직 녹지직렬 및 녹지연구 공무원수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채용)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사통계 (2020.12.31 기준)

□ 기술 자격 취득자 현황

- 기술 자격 취득자는 2020년까지 누적하여 기술사 438명, 기사 18,861명, 산업기사 14,051명, 기능사 87,470명으로, 총 120,820명

□ 조경 기술자

- 조경 분야 특급기술자는 4,054명, 고급기술자 3,739명, 중급기술자 4,139명, 초급기술자 21,360명 등, 총 40,131명의 기술자 등록

7. 대국민 인식조사

□ 설문조사 개요

- 설문개요: 2021년 7월 27일 ~ 8월 6일간 전국 광역시 및 수도권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총 600명으로 시행

□ 조경에 대한 일반적 인식

- 생활 속 조경을 중요하다고 인식(84%)
- (조경의 역할) 도시에 녹지를 공급해 도시민의 건강을 향상하는 것(69.2%),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65.3%)으로 인식
- (조경의 가치) 도시에 녹지를 공급해 도시민의 건강을 향상하는 것(69.2%),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65.5%)을 향후 역할로 중요하게 인식

□ 조경공간에 대한 인식

- 대표적인 조경공간은 도시공원(77.7%)으로 인식, 생태숲(도시숲), 광장/거리화단, 건물 외부공간, 정원 순으로 조경공간을 인식
- 생활 속 조경공간이 부족하다고 인식(부족하다 34%, 충분하다는 응답이 25.2%)
- 가장 기억에 남는 조경공간을 해외공원으로 꼽음
 - 센트럴파크나 하이드파크 등 해외공원으로 응답(64명)
 - 국내에서는 서울숲, 순천만국가정원, 일산호수공원 순으로 응답

□ 공원·녹지에 대한 인식

- 월 1~3회 이상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국민이 76.6%에 이를 정도로 이용빈도 높음
- 이용하는 공원녹지에 대한 만족도(41.8%)는 높지 않고, 개선 필요 시설로는 휴식공간(45.3%), 산책로 포장(28.3%), 수경시설(28.3%) 순으로 응답
- 해외 도시와 비교해 공원·녹지 양은 비슷하지만(56.7%)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다고(51%) 평가

□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공원녹지의 효과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조경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86.7%)고 인식
- 공원녹지의 탄소저감 효과도 높은 편(64.3%)으로 응답

8. 전문가 조경정책 인식조사

□ 설문조사 개요

- 설문개요: 2021년 7월 27일 ~ 8월 6일간 계획/설계, 시공/관리, 교육/연구, 정책 분야 총 178명의 전문가 대상으로 수행

□ 추진전략과 실천과제에 대한 선호도

- 추진전략 중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를 “공원·녹지 정책·제도 정비”와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계획 및 선도사업”으로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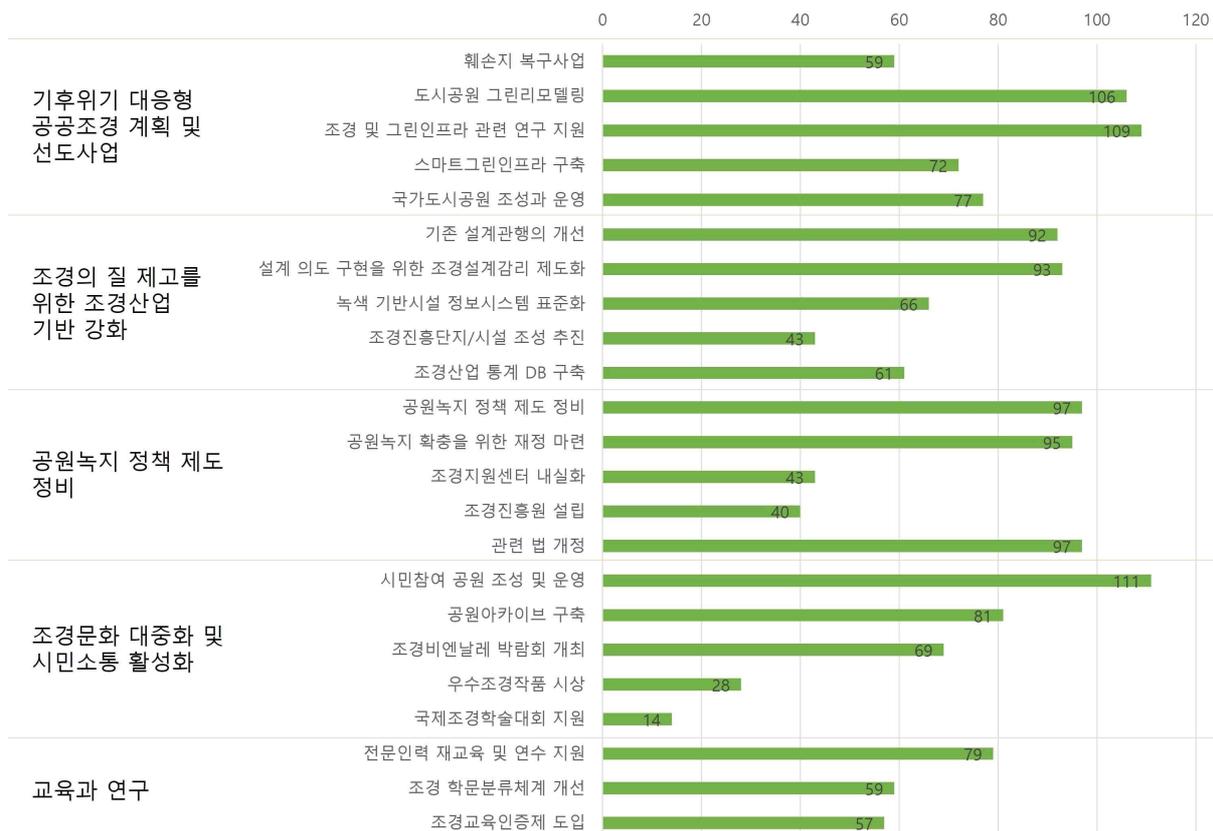


그림 6. 실천과제별 우선 순위 응답자수

□ 세부사업별 의견

- (스마트공원) 신규 조성,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1.3%
- (국가도시공원) 필요성에 대해 77.2% 전문가가 응답
- (그린인프라 계획) 전문가 대부분이 필요하다(92.4%)고 인식
- (조경진흥시설)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으나(45.6%) 필요성은 높다(86.6%)고 인식
- (조경진흥단지) 인지도는 낮으나(42.3%) 필요하다(73%)는 응답이 많음
- (조경지원센터) 조경 관련 법과 제도 지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역할을 기대
- (조경진흥원) 진흥원 설립에 대해 91.2%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식
- (조경교육인증제) 인증제 도입은 95.5%의 전문가가 필요성 인식

9.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위한 시사점과 방향 도출

□ 시대 변화에 대응

-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공간복지로서 조경의 역할 대두
-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조경의 역할 증대
-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 일자리로서 조경공간의 변화와 발전 필요
- 도시개발과 관리방식의 변화 시점

□ 조경 관련 법제 보완 필요

- 조경공간(공원, 녹지 등)의 진흥과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필요
- 공공조경에 대한 총괄부서를 통해 녹색정책을 선도
- 조경지원센터 기능 수행 지원과 「조경진흥법」의 실행력 제고 필요

□ 조경산업의 합리화 필요

- 조경산업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 데이터 기반 산업발전 모색 필요
- 공정한 설계대가와 합리적 계약환경 구축
- 조경공사 설계와 시공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 필요
- 녹색산업 기반단지 및 시설 조성

□ 조경공간의 양적 확충 요구

- 생활 속 조경공간 부족(대국민 인식조사에서 34%)
- 계층과 소득에 따라 조경공간 이용 차이(고연령층, 저소득층일수록 주변 공터, 생활권 공원 위주로 이용)
-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에 대한 높은 수요(대국민 인식조사에서 57.3%가 지역 내 근린공원 조성 희망)
- 기후변화에 대한 공원녹지 효과가 크다고 인식(대국민 인식조사에서 86.7%가 기후변화 대응에 조경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응답)

□ 조경공간의 질적 개선 가능성

- 양질의 인력 풍부(연간 조경 전공 대학 졸업생 약 1,060명, 석박사 졸업생 120명 배출, 2020년 기준 기술 자격 취득자 120,820명, 조경 기술자 22,925명 보유)
- 기후변화, 녹색 인프라 등과 관련한 풍부한 연구 실적(연간 약 200편 이상의 논문 발표, 도시재생, 도시공원, 기후변화 등 정부 정책과 관련한 연구 다수)

IV.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비전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공간복지 조경”		
목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녹색기반 구축	국민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조경 서비스 실행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국토환경 구현
추진전략	정책과제	실천과제	세부사업
I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강화	1. 탄소흡수형 그린인프라 계획 지원	1-1. 그린인프라 네트워킹 및 기능 향상 1-2. 다기능 그린인프라 사업 지원	1-1-1. 개발사업에서의 그린인프라 기능 제고 1-1-2. 그린인프라 정보체계 통합 및 데이터 수집 1-2-1. 녹색시설 지원 기반 마련 및 시범 설치 1-2-2. 탄소흡수형 그린인프라 조성 기술 연구 추진
	2. 도시공원 선도사업 추진	2-1. 탄소중립형 공원녹지 조성 기반 마련 2-2. 국가도시공원 조성 시범 사업 기획	2-1-1. 스마트 공원녹지 사업 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2-1-2. 공원녹지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2-2-1. 국가도시공원 시범사업 모델 기획 2-2-2. 국가도시공원 시범사업 추진
II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3. 공공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환경 개선	3-1. 공정한 설계환경 조성 3-2.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발주 및 감리제도 개선	3-1-1. 조경설계공모 제도화 3-1-2. 공정한 계약기준 마련 3-2-1. 조경 감리제도의 합리화 3-2-2. 조경 발주제도의 합리화 3-2-3. 조경설계 자격 및 면허제도 추진
	4. 조경 관련 녹색산업 기반 강화	4-1. 조경 관련 산업 정보 체계화 4-2. 녹색산업 기반 단지 및 시설 조성 지원	4-1-1. 조경산업 통계자료 구축 4-1-2. 조경 BIM 연구 지원 4-2-1. 조경진흥단지 지원 4-2-2. 첨단 조경진흥시설 지원
III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도 정비	5.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기반 마련	5-1. 조경진흥법 실효성 강화 5-2. 생활 SOC로서 공원·녹지 확충	5-1-1. 조경진흥법 개정 5-1-2. 조경지원센터 활성화 5-2-1. 공원·녹지 사각지대 해소 5-2-2.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6. 공공조경 기반 강화	6-1. 공공조경 진흥을 위한 전문성 제고 6-2.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재정 다각화	6-1-1. 녹색복지 총괄기구로서 조경진흥원 설립 추진 6-1-2.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참여 활성화 6-2-1. 형평성을 고려한 공원·녹지 확충 지원 6-2-2. 재정 다각화 방안
IV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	7. 조경문화 확산과 국민소통 활성화	7-1. 조경문화 확산 7-2. 국민소통 활성화	7-1-1. 공원아카이브 구축 7-1-2. 우수 공원·녹지 및 조경시설물 시상 제도화 7-2-1. 주민참여 공원조성 및 운영 7-2-2. 생애주기별 조경 교육사업 추진
	8. 조경 교육과 국제교류 지원	8-1. 조경 교육 지원 8-2. 국제협력과 교류 추진	8-1-1. 전문인력 재교육 및 연수 지원 8-1-2. 조경교육체계 합리화 지원 8-2-1. 조경비엔날레 및 박람회 개최 8-2-2. 국제 회의 개최 및 교류 지원

V.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추진전략 |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강화

□ 배경 및 여건변화

-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 폭염, 미세먼지 등 국민 생활환경 악화 및 국가의 역할 증대
- 2050 탄소중립 정책 및 그린뉴딜 계획
 - 「2050 탄소중립」의 5대 기본방향 중 “탄소 흡수 수단 강화”에 따라 디지털 기술과 연계하여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정책 추진
 - ‘그린뉴딜’은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추진하기에 조경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

□ 과제와 필요성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 필요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식재 수종 및 식생 구조 개발을 통하여 공원 및 녹지 신규조성 및 리모델링에 적용하여 탄소 중립에 기여
- 국민이 체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경공간 조성 필요
- 탄소흡수형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국토환경 조성·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 공공조경 시범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흡수형 조경공간 정책사업 선도 추진

정책과제 1. 탄소흡수형 그린인프라 계획 지원

실천과제 1-1. 그린인프라 네트워킹 및 기능 향상

세부사업 1-1-1. 개발사업에서의 그린인프라 기능 제고

□ 배경과 필요성

- 공원·녹지는 재해 완충 지대 및 탄소흡수원으로 중요 기능 수행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 증가, 자연녹지지역 감소, 도시공원 일몰제(장기미집행공원 해제)로 도시공원 면적 감소
 - 2020년 기준 훼손지 복구사업 확정 93건 중 복구사업 방식 51건, 보전부담금 납부 31건, 병행 10건으로 보전부담금 납부 비중도 많은 편*
- * 국토연구원(2021), 국토정책 Brief 834.
- 시대 변화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을 탄소중립벨트(탄소저장벨트) 개념으로 전환 필요

□ 실행방안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을 탄소흡수원 선도사업으로 추진
 - 접근성이 좋은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에 생활권 여가 공간, 녹피율이 높은 주민참여형 도시농업공원 조성 시범사업 추진
-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시 회복력에 기여할 수 있는 재해·재난 대비 또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방재공원' 시범사업 추진
 - 국토 단위 재난 규모에 기반한 방재공원 설치기준 및 수행기능 정립
 -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복합적 기능을 갖춘 방재공원 시범사업 추진
 - 재난관리기금 연계 방안 모색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흡수원(공원녹지) 연동방안 모색
 -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은 온실가스 흡수효과가 있으므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에서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
 -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공원녹지 조성사업이 탄소 상쇄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반영 추진
 - *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경우 「온실가스법 시행령」 제48조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감축실적형 탄소상쇄사업으로 타당성을 평가받은 것으로 인정
- 개발사업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연동한 공원·녹지 조성
 - 녹지를 훼손한 개발사업자는 훼손녹지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배출권을 구매하고, 녹지를 조성한 개발사업자는 조성 녹지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여 배출권 판매
- 지방자치단체의 공원·녹지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하여 추진
 - 공원·녹지량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으로 환산 적용
 - 공원·녹지량이 많거나 증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증가해 잉여허용량은 판매하고, 공원·녹지량이 적거나 감소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축소되어 배출권을 구매

□ 기대효과

- 기후변화 대응, 그린인프라 기능 향상
-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준수
 -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온실가스 흡수원 조성으로 대체 해결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하고 환경을 개선
 -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벌이지 않더라도 재정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개발사업을 자제. 특히 인구가 적고, 녹지가 많은 지방 정부는 개발사업 없이 재정을 확보해 환경 훼손 최소화

○ 국민 생활 복지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

[경상북도 도시형 숲 공원 '천년 숲' 활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자 승인]

- 경북도청 신도시에 조성한 도시형 숲 공원으로 8ha 부지에 숲 복원 조성
- 예상수익은 약 4천5백만원(2018.4 기준 배출권 1톤당 2만2천원)으로 전망
- 쾌적한 환경 제공하는 동시에 수익 창출



그림 7. 도시형 숲 공원 천년 숲 전경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그림 8. 천년 숲 전경

자료: 경상북도

세부사업 1-1-2. 그린인프라 정보체계 통합 및 데이터 수집

□ 배경과 필요성

- 그린인프라는 기후변화 및 환경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 수단
 - 그린인프라는 탄소흡수원의 기능뿐 아니라 도시 열섬현상 완화, 대기 오염물질 흡수, 국민 휴식공간으로의 기능,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문화적 기능 등 다양한 공공적 가치 보유
- 그린인프라는 서로 연결될 때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지만, 그린인프라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다르고 지리정보시스템은 여러 레이어로 분리되어 있어 그린인프라의 통합적 정책 수립 및 효율적 추진에 한계
- 그린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장하거나 신규 조성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 통합 선행 추진

□ 실행방법

- 공원, 하천 및 물길, 녹지축과 녹도, 가로수와 가로변녹지공간, 옥상 녹화, 도시농업공간, 녹색건축물 인증 같은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공간정보포털(브이월드)에 '그린인프라정보시스템' 항목으로 구성
 - 토지·수문 지형도면고시의 도시공원 경계,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에 구축된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등의 도시계획 공간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분산된 그린인프라 정보 통합
 -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물환경정보시스템으로 링크되는 것과 같이 그린인프라를 중심으로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
- 환경부,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과 연동한 그린인프라정보시스템 통합 고도화
 - 환경부의 자연공원, 습지, 생태계 정보, 산림청의 수목원, 정원, 도시숲, 문화체육관광부의 골프장, 문화재청의 명승, 유적, 해양수산부의 해양생태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교육부의 학교 외부 공간 등의 지리정보를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 탄소흡수량을 최대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미시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린인프라정보시스템에 반영
 - 국토환경 그린인프라 내 식생의 수직 높이, 수목 캐노피 범위 등 미시적 데이터 발굴·수집

□ 기대효과

- 그린인프라 중요지역과 취약지역에 그린 네트워크의 연결과 확장 지원하고 그린인프라 공간정보서비스 제공
- 국토·도시환경의 열섬효과 완화, 탄소 흡수,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기여

실천과제 1-2. 다기능 그린인프라 사업 지원

세부사업 1-2-1. 녹색시설 지원 기반 마련 및 시범 설치

□ 배경과 필요성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2022년 3월 폐지 예정,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응 필요
-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녹색제품'이라 하며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자 함
 - 녹색건축물은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의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을 운영
- 조경시설은 도시에서 탄소흡수와 저장 기능성이 높은 시설로 외부와 맞닿는 접촉면이 넓고 다양함
- 이들 조경시설이 환경과 생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녹색시설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실행방법

- 녹색시설 유형 발굴 및 활용 방향에 대한 연구 지원
 - 기존 조경시설과 구분하여 녹색시설 범위와 유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필요
 - 녹색시설이 도시환경에 잘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수립

○ 녹색시설 인증 제도 준비

- 「탄소중립기본법」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활용하여 녹색시설에 적용 가능
 - *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7개 유형
-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 생산 과정의 환경성만 반영하고 있어, 녹색시설 설치 후 환경과 탄소흡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평가할 수 없음
-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제31조 ‘녹색건축물’, 제32조 ‘녹색교통’을 분리한 것처럼 환경성이 높고 탄소흡수 기능을 최대화한 ‘녹색시설’을 별도로 구분하는 제도 운영 필요

○ 우수 녹색시설 지정 수상 등 인센티브 제도 운영

- 「조경진흥법」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수상 조항을 활용하여 녹색시설로서 기능이 우수한 조경시설을 우수 녹색시설로 수상

○ 우수 녹색시설의 시범 설치 지원

- 우수 녹색시설로 지정된 조경시설은 도시 공공공간에 시범 설치 지원
 - * 「탄소중립기본법」 제5조에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해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도록 되어 있음

○ 녹색시설 지원 제도 정비

- 「조경진흥법」에 ‘녹색시설’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도록 개정
- 「탄소중립기본법」에 ‘녹색시설’ 관련 내용이 추가되도록 협의, 향후 「탄소중립기본법」과 연계하여 「녹색시설 설치 지원법」, 이에 따라 「녹색시설 인증에 관한 규칙」 등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

□ 기대효과

- 도시 내 녹색시설을 통해 탄소흡수 및 저장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 녹색시설 지원을 통해 친환경적 조경 소재 부문 및 조경시설 활성화에 기여

세부사업 1-2-2. 탄소흡수형 그린인프라 조성 기술 연구 추진

□ 배경과 필요성

- 국토교통부 탄소저감 관련 연구는 건축 부문 저탄소에너지 고효율 건축기술 개발, 도시 부문 스마트시티 개발,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에 집중
-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에 기여하는 공원, 녹도, 건축물 외부 조경 공간 등 **그린인프라의 탄소흡수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그린인프라 성능을 높이는 기술 연구가 필요

□ 실행방법

- ‘국토교통연구기획’ 연구사업을 통해 **그린인프라 관련 R&D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발, 조성 기술의 실용화 추진**
- 국토교통 R&D 단위사업에 **그린인프라 조성 기술 연구 단위사업** 신규 개설을 추진하여 공원녹지의 탄소흡수원 기능 강화를 실행할 수 있는 연구 진행
 -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저탄소 조경소재 기술을 개발하여 공원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에 활용
 - 건축물 녹화 대상 발굴 및 사계절 기후에 적응하는 기술 개발 및 식물 가이드라인 제시
 - 공원녹지 기후변화 완화형 모델 연구 및 디자인 툴킷 개발(그림 9 참조)
 - 공원녹지별 탄소흡수량을 산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그림 10 참조)
 - 그린인프라가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 기존 국토교통 R&D 단위사업에 **그린인프라 연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
 - 물관리 연구사업에 다기능 홍수예방공원, 도시형 습지 및 못 도입방안 연구 제안

정책과제 2. 도시공원 선도사업 추진

실천과제 2-1. 탄소중립형 공원녹지 조성 기반 마련

세부사업 2-1-1. 스마트 공원녹지 사업 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 배경과 필요성

- 현재 스마트도시 정책사업으로 국가시범도시,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공원녹지는 대표적 탄소흡수원으로 도시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도시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대상이 아님
-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도시지역 내 스마트 공원녹지 조성사업의 추진 필요

□ 실행방법

- 유형별 스마트 공원녹지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추진방향 수립
 - 생활권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공원 유형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 맞춤형 전략 수립
 - 스마트조경시설·시스템 등의 도입 방안, 인센티브 제공, 첨단기술 R&D 투자 등 활성화 전략 수립
- 스마트 도시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 추진
 - 국가시범도시에 신규 스마트 공원녹지 조성방안 협의 및 시범사업 추진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원 서비스 사례를 피드백하여 향후 시범사업 방향 모색)
 -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과 연결하여 이용률이 높은 공원녹지에 스마트 공원녹지로의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에 공원녹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 지자체와 협력하여 스마트 공원녹지 계획, 설계, 시공, 운영관리 단계별 가이드라인 연구 지원
 - 기획 및 추진계획 수립방안, 세부지침(설계, 시공, 감리, 운영관리 등), 대상지 공모 및 선정, 국민 요구사항과 참여 활성화 방안 등 단계별 가이드라인 작성
- 첨단기술이 도입된 조경시설, 조경소재를 발굴하여 디자인 툴킷 개발(그림 11 참조)
 - 첨단 디지털 기술이 도입된 조경시설과 조경소재를 발굴 및 목록화
 - 향후 R&D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기반 마련 기획

□ 기대효과

- 공원녹지의 스마트화를 통해 재해·재난에 탄력적 대응, 국민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
- 디지털 데이터에 기반한 계획, 설계, 시공, 운영관리로 국민 요구 및 참여 활성화 및 공원녹지 관리 효율성 제고, 공원녹지의 탄소 흡수 기능 최대화
- 스마트 공원녹지 시범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 실천사례 제공
- 이용률이 높은 노후화 된 공원녹지의 스마트화를 통한 국민 체감 향상 및 참여 유인, 국민 건강과 안전 증진에 최적화

[The UCLA Luskin Center for Innovation에서 발행한 SMART Parks Toolkit]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쉽게 접근 가능하고,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하며, 수자원과 에너지 효율성 강화, 쉬운 유지관리, 커뮤니티의 건강과 안전 증진을 목표로 스마트공원 툴킷 개발
- 경관, 관개, 우수, 포장, 활동프로그램, 공원시설물, 편의시설, 조명, 디지털 경관 등 다양한 사례 제시
- 기후와 토양 상태에 따른 스마트 관개 컨트롤러 제안: 물 사용량 감축과 유지관리 비용 감소 효과
- 인터랙티브 놀이시설 제공: 언어, 문화적 다양성, 장애 등 커뮤니티 요구 맞춤형 시설
- 에너지 생산 운동 기구: 커뮤니티 건강 증진 뿐 아니라 에너지 생산에 기여
- 자동 잔디 깎이: 가스로 운영되는 잔디 깎이 기계 대체
- 조명시설 개선: 이동통신에 맞춘 조명시설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원의 안전성 제고, 공원 방문객 증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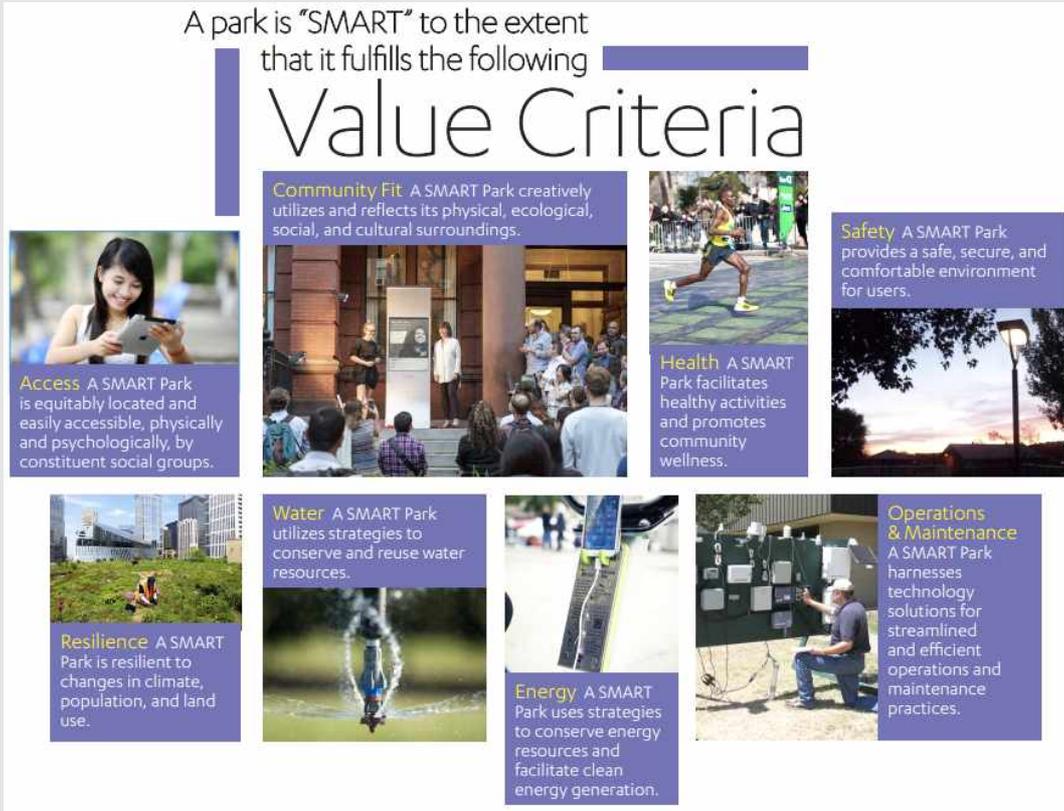


그림 11. 스마트공원의 지향 목표와 추천 도입시설을 설명해주는 지침 사례
 자료: The UCLA Luskin Center for Innovation, 2018, SMART Parks Toolkit.

세부사업 2-1-2. 공원녹지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 배경과 필요성

-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공공재 및 공공공간으로서 도시공원의 가치
 - 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 에너지 생산 시설 등을 통해 전력 소비와 생산량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홍보와 학습의 효과 기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거점공간으로서 도시공원의 기능 및 가능성
 - 공원 건축물의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수직정원), 빗물저장시설(레인 가든, 저류조 등), 지하유출수를 활용한 수경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및 활용시설 도입 추진
- 도시공원의 확충과 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음
 -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공원녹지에 대한 만족도(42%) 높지 않고, 도시공원 시설의 개선 요구는 높음
 - 도시공원의 지속적 확충과 리모델링, 관리가 필요

□ 실행방법

-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공원녹지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마련
 - 식재구조에서 탄소흡수 및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최대화한 다기능성 공원녹지 리모델링 계획 가이드라인 제공
 - 수목, 수자원, 토양, 포장재 등 리모델링에서 참고할 수 있는 소재 가이드라인 제공
- 빗물관리형 공원녹지 리모델링(가칭 그린스펀지파크) 시범사업
 - 저지대에 위치하는 노후 공원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공원 녹지 리모델링시 저류지 조성 및 LID기법 적용을 의무화하고,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인증함
- 미기후조절형 공원녹지 리모델링(가칭 쿨링플랫폼파크) 시범사업
 - 지하 유출수를 활용한 미기후 조절, 옥상녹화 및 수직정원 조성, 안개분수 설치 등을 통해 도시 열섬효과 저감

□ 기대효과

- 공원녹지의 물 저장 능력 강화를 통한 집중호우 피해 저감 및 탄소중립 실천
- 다기능 그린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는 노후된 공원녹지 리모델링 추진 당위성 확보
- 공원녹지 유지관리비용 절감

실천과제 2-2. 국가도시공원 조성 시범사업 기획

세부사업 2-2-1. 국가도시공원 시범사업 모델 기획

□ 배경과 필요성

- 헌법과 공원녹지법에 명시
 -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시공원은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중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가 지정(제15조), 국토부장관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제25조의2)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형공원의 필요성 대두
 - 대국민 인식조사는 77%가 필요성 인식
 - 기후위기와 Covid-19로 인해 국민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으로 전 세계적 이슈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대형공원이 필요한 시점임
- 「공원녹지법」에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국가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
 - 도시숲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명시
 - 국가정원, 도시숲, 국립공원, 특별법에 의한 국가공원인 용산공원, 그린벨트 등 전 국토 공원녹지체계의 정책 및 로드맵 구상은 국가가 수행할 수 있음

- 현 제도상으로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이 어려운 현실
 - 300만㎡의 공원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은 현재 우리 국토 여건상 현실화하기 어려움

□ 실행방법

- 제도 정비 방안 연구
 - 미지정 사유 진단, 공원·녹지 관련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체계 도입
- 지정의 현실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안 마련
 - (법률) 「용산공원법」, 「수목원정원법」 등과 유사하게 국가의 직접 설치 가능 규정 및 국가의 역할·책무에 관한 규정 등 신설
 - (시행령) 면적기준, 예산 실행 및 관리·운영방식 등에 대한 규정 개정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재원 마련

□ 기대효과

- 법제도 개선으로 국가도시공원 조성 실현의 기반 마련
- 한국형 모델과 유형 개발
-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공원녹지에 대한 국가 역할 제고

세부사업 2-2-2. 국가도시공원 시범사업 추진

□ 배경과 필요성

- 공유재로서 공원녹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
 -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가의 책임, 대형녹색공간 필요, 보존과 관리 필요성 등에 공감
- 지자체별로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다양한 담론 수렴과 가능성 탐색
 - 광주중앙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낙동강 하구 등
-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기반과 전략 마련

□ 실행방법

- 법령 개정 후 국가도시공원 공모 추진
 - 생태보존이 중요한 비도시지역과 도시의 연계, 역사문화유적을 포함한 도시지역, 기존 공원을 포함한 지구 범위 선정 등
- 국가도시공원 시범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거버넌스 방식의 공원 조성 및 운영·관리방식 도입 검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구분, 예산편성, 관리운영의 실천적 대안 도출

□ 기대효과

-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국가도시공원 조성
- 그린일자리 창출, 탄소저감 등 국민 삶의 질 향상
-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국토환경의 관리

□ 배경 및 여건변화

- 국민의 양질의 공공 조경공간에 대한 관심과 여가·관광 수요 증가
 - 도시공원, 정원, 수목원, 식물원 등 조경공간에서의 여가·관광 활동이 점진적 증가 추세
- 시대변화와 국민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에 관심 및 수요 증대
 - 조경 수준이 해당 지역의 도시경관은 물론 공동주택의 가치와 주거환경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인식

□ 과제와 필요성

- 국민소득 증대, 여가수요 및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공원·녹지공간의 질적 제고 필요
- 조경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
 - 공원녹지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정책적 시도 필요
 - 「조경진흥법」이 조경분야 진흥을 위해 실효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 조경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구조의 합리화 필요
 - 수준 높은 조경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조경 행위(조경 산업)의 합리화가 필수
 - 설계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설계의 질을 제고
 - 설계 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자가 감리하는 제도 마련 필요

정책과제 3. 공공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환경 개선

실천과제 3-1. 공정한 설계환경 조성

세부사업 3-1-1. 조경설계공모 제도화 추진

□ 배경과 필요성

- 균등한 설계 참여 기회 보장 필요
 - 가격입찰, PQ 발주 방식은 대규모 업체에 유리하고, 소규모 설계 사무소는 능력과 열정이 있더라도 수주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
 - 대규모 업체뿐만 아니라 소규모 또는 신진 조경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발주 방식인 “설계공모”를 통한 발주 확대 필요
- 조경설계 공모 방식의 활성화와 제도화 필요
 - 소규모 설계업체, 신진 조경가 등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 제공으로 고용 안정과 산업 진흥에 기여
 - 설계(안)으로 결정하는 설계공모는 수준 높은 조경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 토대
- 불공정한 계약 실태 개선
 - 하도급 계약의 실태를 보면 하도급자에게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
 - 가능한 한 공정한 계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제도화 및 시행 시급
- 공공조경의 품격 향상과 우수한 조경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공모 활성화 방안 추진 필요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공공기관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 공모방식 우선 적용 규정

□ 실행방법

- 「조경진흥법」 개정을 통해 공공조경(공공기관 발주 조경공간)의 설계 공모 제도화 추진
 - 도시공원, 광장, 하천, 지방정원, 국가정원 등 공공기관 발주를 통해 추진하는 공공조경사업은 설계공모 확대 및 제도화 추진
 - 중장기적으로 조경사 자격증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공조경사업 설계에 대한 조경관련 자격 기준 제도화 추진
-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설계공모 제도화
 -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고 수준 높은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 우수한 계획 및 설계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추진 규정 신설
 - 「공원녹지법」에 “도시공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설계공모를 시행할 수 있다”, 또는 “필요한 경우 설계공모를 시행한다”는 조항 신설
- 조경 설계공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 설계공모 운영관리 고도화를 위하여 기획단계부터 당선작 선정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관리 조직 필요
 - 공공조경 발주기관(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설계공모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조경지원센터 중심으로 사업별 설계공모운영관리위원회 구성하여 추진

□ 기대효과

- 조경 설계의 균등한 기회 부여 및 조경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균등한 기회 제공 및 공정경쟁을 통해 수준 높은 조경설계 도출
 - 우수한 조경공간 창출을 위한 책임감 있는 조경서비스 제공
- 우수한 조경공간의 확대로 품격 있는 국토환경 조성 및 국민 편익 증대
 - 높은 수준의 공간은 좋은 설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좋은 조경공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는 조경문화 향상에 기여

세부사업 3-1-2. 공정한 계약기준 마련

□ 배경과 필요성

- 불공정한 계약의 관행으로 조경서비스의 질 저하
 - 계약기간 연장, 각종 행정절차 증가, 공사비 증가 또는 부족으로 인한 재설계, 의사결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대부분의 부담이 조경설계자에게 전가되는 실정
- 합리적인 표준계약서의 작성, 보급 및 활용을 위한 제도화 필요
 - 표준계약서 제도는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분쟁과 소송, 재정적 소모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에서는 건축, 조경, 토목 등 건설업 전반에서 적용이 일반화
 - 국내는 건축서비스 부문만 별도 적용

□ 실행방법

- 조경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표준화 기반 조성 검토**
 - 설계정보·설계기준, 설계도서 양식, 조경 자재, 설계자 선정방식·절차, 조경서비스 유형별 업무 및 대가기준의 표준화
- **표준화 보급시책 검토**
 - 표준계약서 제도화 추진(국토교통부 고시), 공공기관 적용 의무화, 민간부문은 권장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조경설계 표준품셈」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시
- 표준화 기반 조성 및 보급시책 추진과 관련된 제도개선 추진

□ 기대효과

- 양질의 조경서비스 제공 및 공공조경의 위상 제고

- 조경서비스산업의 안정적인 기반 확보,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도모
 - 발주처 입장에서는 명확한 근거에 의거하여 업무 진행 및 예산 집행 가능
 - 설계사 측에서는 정당한 대가 및 보상을 통해 양질의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선순환 도모

실천과제 3-2.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발주 및 감리 제도 개선

세부사업 3-2-1. 조경 감리제도의 합리화

□ 배경과 필요성

- 조경공간의 질적 저하 및 임의적 시공 방지,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조경감리제도 개선 필요
 - 조경감리의 제도적·법적 기준 미비
 - 공공조경 조경감리제도 미흡, 민간부문은 비전문가의 조경감리 시행 중임
 - 특히 민간부문 주택건설공사는 1500세대 이상 감소 추세에 따라 조경감리 사례 정체
 - * 조경감리 사례: ('16)520건 → ('17)342건 → ('18)283건 → ('19)285건 → ('20)345건
- 조경 설계와 시공의 분리로 인한 조경공간의 질적 수준 저하
 - 설계자로부터 납품받은 설계도서로 공사를 발주하는 현행 방식은 설계자의 의도가 시공단계까지 전달되지 않아 설계의도 구현이 미흡한 실정
 - 최종 생산된 조경공간에 대한 책임 소재 모호 및 생산된 조경공간의 질적 수준 보장 어려움
 -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실행방법

- 조경감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보완
 -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조경공간 기술적 기준이나 감리 기준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위해 협의 요청
 - 「주택건설공사 감리기준」(국토교통부 훈령)의 조경감리와 관련된 규정 개정 검토 요청
-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시공과정에 설계자의 적절한 참여가 이루어 지도록 제도적 지원
 - 조경공사 시공과정에 설계자 참여 내용 및 책임범위 규정 신설
 - 감리보고서에 참여설계자의 확인을 받도록 제도 보완

□ 기대효과

- 조경공간의 품질 제고, 설계 의도 구현으로 조경서비스 질 향상
- 조경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녹색일자리 창출 및 국토환경의 품격 제고

세부사업 3-2-2. 조경 발주제도의 합리화

□ 배경과 필요성

- 조경시공 분야는 대표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공사비 누수, 결과물에 대한 책임성 모호 등으로 공공공간의 질적수준 저하 야기
- 주 공종(건축, 토목 등)에 포함되어 통합발주 되는 조경은 비전문업체 등의 임의 시공, 주요 공정의 전문 시공 불가, 공정별 필수 공사 기간 미확보로 공간의 질 저하 및 빈번한 하자 발생
- 조경전문업종의 특정 기술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통합 발주되는 대업종화 건설생산체계 개편안은 조경시공의 전문성 및 생산 품질 저하 초래

□ 실행방법

-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도입을 통한 수주 참여 기회 확대
 - 설계사, 시공사, 전문업체, 자재업체 등이 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이행방식이나 분담이행방식을 도입하여 조경공간의 질 향상 도모
 - 주 공종(건축, 토목 등)의 하도급이 아니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조경공사의 책임성과 자율성 보장
- 주력분야 제도 운영 및 추가 세분화 추진 시 전문 공종 세분화 반영
 -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외 생태복원공사업, 놀이시설공사업, 관수 수경시설공사업 등으로 세분화

□ 기대효과

- 하도급 단계 축소로 공사비 누수를 줄여 시공품질 향상
- 공사비 누수 방지, 수평적 협력 가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세부사업 3-2-3. 조경설계 자격 및 면허제도 추진

□ 배경과 필요성

- 조경설계는 기술사사무소(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건축사와 달리 기술력 기반 등록업종으로 디자인을 검증하는 설계전문 자격으로는 한계
 - * 조경기술사는 설계에 대한 검정 없이 서술형 이론 평가만 실시
- 또한, 기술사시험 응시자격 기준 및 준비기간, 높은 시험난이도*로 현재 등록된 조경기술사사무소는 67개(22.03. 현재)에 불과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신규 등록시 특급기술자를 필요**로 하므로,
 - 젊고 경쟁력 있는 신진 조경설계전문가의 창업 또는 책임기술자로서 직접참여가 어려워 자격대여, 하청참여 등 불법·편법의 원인 제공

- * (조경기술사) 응시를 위해 조경기사 취득 후 4년 이상 실무경력 필요, '16년 ~ '20년간 총824명 응시자 중 합격자는 79명만 합격(합격률 9.58%)
- **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제33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특급기술자 포함 3인의 기술자, 특급기술자는 기사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최소 10년이상 실무경력 필요
- 現조경설계 주체인 조경기술사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조경설계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설계 디자인 자격을 검증하는 제도·면허에 대한 검토 필요

□ 실행방법

- 조경사제도(가칭) 추진을 위한 연구 및 조경사제도의 효과적 운영 관리와 자문을 위한 체계 마련
 - 자격취득 방법, 활동영역, 경과조치 등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한 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법제화 및 조경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초기 운영조직 구성
- 조경사 법령 제정에 따라 건설산업 및 설계업 등록 관련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 협의 병행 및 기존 조경기술사 개편안을 검토하되,
 - 단기적으로 조경설계 공모 활성화 등 조경 디자인에 대한 홍보 및 국민인식 제고를 통해 조경사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 * 건설기술법, 건설산업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 장기적으로 조경사 제도의 성공적인 추진과 국제적으로 통용가능한 인증*을 위하여 조경교육인증제(전문학위) 등을 연동하는 방안 검토
 - * 국제적으로 북미, 호주, 뉴질랜드, 유럽, 싱가포르 등에서 조경교육인증 제도 시행, 세계조경가협회에서 '08년부터 조경교육 승인/인증 안내 문서 제공
 - * (건축교육인증제) '05년부터 건축학 전문학위 프로그램 인증제도 시행 중

□ 기대효과

- 조경설계의 전문화 및 수준 제고에 따른 조경공간의 질적 향상으로 국토환경의 질 향상과 국민복지에 기여
- 조경설계자의 투명한 자격 관리 및 위상 제고, 공정성 있는 사업참여 기회 제공 및 국제적 인증이 가능한 전문가 양성기반 마련

정책과제 4. 조경 관련 녹색산업 기반 강화

실천과제 4-1. 조경 관련 산업 정보 체계화

세부사업 4-1-1. 조경산업 통계자료 구축

□ 배경과 필요성

- 정책 수립·평가를 위한 산업 관련 기초자료 부족
 - 조경산업 관련 국가 차원의 통계 및 기초자료 부족
- 합리적인 조경정책 방향, 전략 수립을 위해 유의미한 통계자료 필요성 대두
 - 국토교통부에서 조경진흥 정책 수립·평가, 조경산업 전반의 활용 등을 위해 기초자료 확보 필요

□ 실행방법

- 조경산업 필수 통계 범위 및 항목 도출
 - (시장규모) 사업건수, 계약금액, 사업건당 계약금액, 매출액 또는 건설공사실적
 - (생산구조)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1인당 매출액
 - (고용 및 노동) 종사자 특성별 인원수, 임금, 전문성, 근로시간 및 휴일, 예비종사자 인원수, 상해 및 사망자 수
 - (R&D/기술) 연구개발 인원수, 건수, 투자금액
 - (산업비중 및 파급효과 등) GDP, 사업체, 종사자, 매출, 부가가치 / 산업연관관계*
- * 건축공간연구원(2020), 「합리적 건축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구축 방안 연구」 참조.
-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을 보완하여 공원녹지 등 조경 및 녹색 공간 현황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 조사 및 구축

- 그린인프라 정보체계와 연계하여 GIS 데이터에 통계자료 연계 제공
- 도시공원 목록 및 지정 현황, 도시면적당 공원녹지 비율, 도보 접근가능한 공원, 많이 방문한 공원, 오래된 공원, 대형공원 등 공원녹지 기초 통계항목 도출 및 자료 확보
- 국가승인 통계화가 가능토록 통계청과 협의, 관련 통계보고서를 조경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지속적 작성
 - 초기에는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조경진흥원에서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 기대효과

- 조경분야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기초적인 통계자료 구축
-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자료로 활용
- 조경분야에 대한 통계조사의 기법, 조사표 표준화, 분류체계 및 학술적 활성화 기반 마련

세부사업 4-1-2. 조경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연구 지원

□ 배경과 필요성

-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BIM 활성화 추세
 - 2021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 작성·배포
 - 공공기관 건설프로젝트 5곳에 BIM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검토
 - BIM 의무화 대상도 LH에서 시행하는 신규 공공주택 공모지구의 25%, 조달청 발주 사업 중 100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등으로 확대
- 조경분야 BIM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건축분야는 이미 BIM에 대한 체계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조경분야는 자연소재의 라이브러리 구축 등 BIM을 도입하는 데에 필요한 선제 조건 및 방안 마련 등이 미흡한 실정

□ 실행방법

- 조경분야 BIM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지원 추진
 - 수목과 지형을 중요하게 다루는 조경분야의 특징상 각 단계별 상세수준을 새롭게 제시하는 방안 필요
- 조경 BIM 상용화를 위한 라이브러리 구축 및 배포
 - 타 분야와 협업을 위해 원활한 프로그램 구동이 가능한 수준의 라이브러리를 구축. 조경설계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방된 표준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조경설계업체가 BIM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조경분야 BIM 시범사업 추진
 - 공공조경부문의 주거단지, 도시공원 등 몇 가지 유형의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BIM 전 과정을 기록하고 내용을 공유
 - 국내 여건에 맞는 BIM 작업방식 정립 및 제도화 추진

□ 기대효과

- 조경분야의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 전반에 BIM을 활용, 작업의 효율성을 도모
 - BIM은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 사업으로 건설 전 과정의 정보를 통합 생산·관리·활용할 수 있음
 -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설계·시공·운용·관리뿐 아니라 철거 및 리모델링에도 효율적으로 정보 활용 가능
- 타 공종과의 원활한 협업으로 효율성 제고
 - 활발하게 BIM을 적용하고 있는 건축, 토목, 도로, 상하수도 등 타 분야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조경 BIM 도입이 시급한 상황
 - 조경공사시 수목식재에 따른 지하매설물, 배수체계, 인공지반식재 등과 관련하여 타 공종과 간섭사항 사전 확인 및 시공상의 문제 예방 가능

실천과제 4-2. 녹색산업 기반 단지 및 시설 조성 지원

세부사업 4-2-1. 조경진흥단지 지원

□ 배경과 필요성

- 「조경진흥법」에 따른 조경진흥단지 조성 실적 부재
- 조경산업에 필수적인 양질의 조경소재 생산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조경진흥단지 필요
- 조경진흥단지는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 그린산업단지'에 적합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수목, 초화류, 잔디 등 살아있는 자원을 다루는 자연친화적 산업 단지, 또는 녹색기술 발전 및 녹색제품 생산을 위한 산업단지로 육성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가능

□ 실행방법

- 조경진흥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적합하도록 모델 개발 및 조성 추진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에 효과적인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제품 생산
- 공공(국가, 지자체) 주도의 조경진흥단지 조성 추진 필요
 - 「산업입지법」, 타 진흥법 관련 사례를 준용하여 공공주도로 조경진흥단지 조성 추진
- 민간주도(입주업체협의회) 조경소재 진흥단지 조성 활성화 방안 제시
 - 조경진흥단지 조성 추진에 필요한 기반시설(교통, 상하수도, 전기) 비용 지원, 의제규정(각종 인허가 절차) 등 개정안 제시

□ 기대효과

- 조경산업에 필수적인 조경소재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집적에 따른 효과 창출
- 조경소재산업 관련 신기술 개발, 협업체계 구축에 따른 경쟁력 강화
 - 생산부터 유통까지 신기술 개발 및 정보 교류 확대*
 - * 컨테이너 재배, 기계화, 자동화, 유통체계 개발, 사업기회 확대, 조경산업 인식 개선, 고객노출기회 확대, 공용장비실, 공용실험실, 공용 전시 및 판매장, 공동 회의실 등
- 견학,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조경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

세부사업 4-2-2. 첨단 조경진흥시설 지원

□ 배경과 필요성

- 조경설계업체(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를 집적한 첨단 조경진흥시설 지원 필요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 신고 후 조경 사업을 하는 조경진흥시설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봄
 -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빌딩을 지정한 것으로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혜택 부여

□ 실행방법

- 공공(국가, 지자체) 주도로 조경진흥시설 지정 및 조성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조성, 조경사업자는 조경진흥시설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임차 지원

- 민간주도의 조경진흥시설 활성화를 위해 지정 및 조성 관련 규정 개선
 - 개별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 사용 세부기준 개선
 - 타 진흥시설 관련 법령을 참고 및 검토하여, 조경의 특성을 고려하고 조경진흥시설에 적합한 지정 요건 및 절차를 실효성이 있도록 개정

□ 기대효과

- 조경진흥시설에 입주하는 조경사업자의 집적 효과 창출
 - 회의실, 각종 장비실 등 공동이용시설의 활용, 경비 절감, 정보 교류, 협업 등 집적 효과 증대
- 조경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배경 및 여건변화

- 공공조경의 질적, 양적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공원·녹지 관련 정책과 법규의 개선 요구
- 지역별로 편중된 공원·녹지의 양적 분포 및 질적 수준 차이 문제
- 각 지자체의 공원·녹지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참여, 재정지원 확보 방안 필요
-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 추진전략으로 선정

□ 과제와 필요성

- 기 지정된 조경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인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다양한 실천과제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공공조경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검토 필요
- 「조경진흥법」, 「공원녹지법」 등 조경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안을
구체화하여 제시

정책과제 5.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기반 마련**실천과제 5-1. 조경진흥법 실효성 강화****세부사업 5-1-1. 조경진흥법 개정****□ 배경과 필요성**

- 조경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원녹지정책 기반 마련 및 녹색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개정 필요

- 조경과 가장 밀접한 건축 분야는 필요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해 왔음
- 조경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조경진흥법」의 제정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미흡한 규정을 보완, 신설하는 등 법령의 개정 추진 필요

□ 실행방법

- 조경의 가치와 공공성 구현, 녹색 산업 기반 강화 등에 필요한 규정 보완 및 신설 추진
 - 조경사업자의 범위확대 : 조경소재 사업자 추가
 - 조경의 행위(업)와 관련된 '정의' 항목 추가(조경디자인, 품질, 품격, 조경설계, 조경시공, 조경감리, 조경유지관리, 조경서비스, 조경서비스사업, 조경서비스산업)
 - 조경관련 녹색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정 개정(조경진흥단지, 조경진흥시설) 및 정의 추가(녹색시설)
- 고품격 국토환경 조성 및 관리, 도시의 정체성 확보에 필요한 규정 신설 등 개정 추진
 - 조경정책위원회(국가, 지방), 민간전문가 참여, 조경설계공모, 조경시공, 조경감리, 조경유지관리, 조경진흥원 설립·운영, 공공조경기획 및 공공조경기획센터 등에 대한 규정 명문화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신설을 통해 실효성 제고
 - 조경의 대상인 「공원녹지법」 상의 '공원녹지'를 실현하는 제도로써 공원녹지의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는 「조경진흥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신설
 - 「건축법」, 「주택법」,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조경관련 법령에서 조경의 대상 및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

□ 기대효과

- 조경전문인력의 역량 발휘, 조경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 조경분야 진흥
- 조경서비스를 제고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고품격 국토환경 조성·관리 및 도시의 정체성 확보에 기여

세부사업 5-1-2. 조경지원센터 활성화

□ 배경과 필요성

- 「조경진흥법」상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조경지원센터* 지정 가능

* 2018.12.06. (사)한국조경학회에 조경지원센터를 지정(제1호), 조경지원센터는 학회 소속 연구센터에 해당

- 타 진흥 관련 법률과 비교 시 조경진흥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의 여건이 취약

- 타 진흥관련 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에 준하는 재단법인 형태의 '진흥원' 설립 근거 규정이 있고, 매년 정부에서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 현재 조경지원센터는 비영리단체인 학회 소속 연구센터로서, 국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조경지원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한계(2019~2021)

□ 실행방법

- 조경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정부 예산 지원 추진
-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연차별 정부 예산 반영 및 지원 필요

- 조경지원센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으로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조경진흥법」 제11조)

* 조경박람회 및 조경전시회 개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보수,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조경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 조경과 관련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확대
 - 중앙부처는 조경의 대상 및 영역과 관련된 사업과 정책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
 -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조경 진흥 정책 및 사업 예산 마련
 - 조경지원센터에서 정부 및 지자체 위탁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조경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에 기여
- 조경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으로 조경 산업의 기반조성 등 조경 진흥에 기여

실천과제 5-2. 생활SOC로서 공원·녹지 확충

세부사업 5-2-1. 공원·녹지 사각지대 해소 (생활밀착형 공원·녹지 확충)

□ 배경과 필요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주변 녹시율 증가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발굴 필요
- 도시공원 일몰제로 감소한 도시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마련

□ 실행방법

- 생활밀착형 공원·녹지 조성 및 지속적 확충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공원·녹지 조성

- 산업유산 일대, 수변, 공개공지, 학교운동장, 다중이용 건축물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원녹지 유형을 발굴
- 공공공지, 대지안의 조경, 공동주택단지의 조경공간 질적 수준 향상 방안 마련
 - 「건축법」, 「주택법」, 「건축물관리법」, 「도시환경정비법」 등 조경 관련 법령상 관계규정 검토
 - 조경면적 산정, 옥상녹화, 생태면적률,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설치기준,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개선
-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조경공간의 양적 확충·질적 제고 방안 마련 및 제도화
 - 개발사업의 기획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조경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및 「공원녹지법」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선

□ 기대효과

-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공원녹지 확충으로 녹색복지 구현
- 탄소저장소 역할을 하는 공원녹지 증가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지역 유희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공원녹지의 확충, 문화 향유, 도시의 정체성 확보

세부사업 5-2-2.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배경과 필요성

-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 면적 감소,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등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정 추진 필요
- 「조경진흥법」 제정·시행에 따른 「공원녹지법」 등 타 법률의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정 추진 필요

□ 실행방법

- 「공원녹지법」의 제정 목적 및 기능 보완
 - 기후위기 시대에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흡수원 및 다양한 계층의 생애주기별 공간복지로서 공원녹지의 역할과 기능 부각
- 「공원녹지법」의 체계적인 작동 등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의' 항목 추가
 - 현재는 도시공원, 녹지, 공원녹지, 도시녹화에 대한 정의 항목만 규정되어 있어 미흡
 -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녹지활용계약, 공원조성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필요한 정의 항목 추가
- 국민의 환경권, 지역간 공원녹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규정* 신설
 - * 국가의 책무에 대한 규정, 지자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 국민의 의무 규정
- 공원녹지의 운영·관리에 대한 규정 보완 및 신설
 -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국민참여의 필요성 및 확대에 부합하는 공원 운영 및 관리 규정(운영 및 관리주체의 다양화, 기준 등) 신설
- 국가도시공원의 작동 체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 추진
 - 국가도시공원 추진 체계(계획, 조성, 운영관리), 지정기준(면적 등), 공원관리청 및 비용부담(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 및 비용부담), 국민참여 등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
- 「조경진흥법」 제정·시행에 따라 「공원녹지법」에 「조경진흥법」과의 관련 규정 신설 추진
 - 「공원녹지법」은 조경의 '대상'과 관련된 법률에 해당하고, 「조경진흥법」은 조경의 대상인 '공원녹지'를 구현하는 '행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므로, 「공원녹지법」에 타 법률과의 관계 규정 신설

※ (예시) 「공원녹지법」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 추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녹지는 「조경진흥법」상의 조경으로 구현되며, 계획·설계·시공·관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기대효과

- 국민의 환경권 보호, 지역간 공원녹지 불균형 해소에 기여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공간복지로서의 '공원녹지' 기능 및 가치 증대에 기여
- 변화된 여건에 부응하고 「공원녹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정책과제 6. 공공조경 기반 강화

실천과제 6-1. 공공조경 진흥을 위한 전문성 제고

세부사업 6-1-1. 녹색복지 총괄기구로서 조경진흥원 설립 추진

□ 배경과 필요성

- 국가정책적으로 조경분야를 진흥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 설립 필요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 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공공기관 등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시행 주체 필요
 -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 조경 및 그린인프라 관련 전담기관의 부재

[타 산업분야 진흥원 및 근거 법률 사례]

- 한국임업진흥원(2012년 설립, 법률 개정)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산림복지정책과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09년 설립)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2년 설립, 법률 개정)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한국콘텐츠진흥원(2009년 설립)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 한국디자인진흥원(2001년 설립) : 산업디자인진흥법 - 산업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10년 설립) : 공예문화산업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한국로봇산업진흥원(2010년 설립, 법률 개정)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 산업자원부 기계로봇과
- 한국소방산업기술원(2008년 설립) : 소방산업의 진흥에관한법률 - 행정안전부 소방청 소방산업과
- 건축진흥원(설립 준비 중)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실행방법

- 조경진흥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조경진흥법」 개정 추진
 - 진흥원 설치, 운영, 조직, 사업, 예산 등에 대한 규정 검토
- 조경진흥원 설립 필요성과 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 세미나, 관련 부처 협의 등 추진
 - 정부에서 준공공기관 형태인 조경진흥원의 설립·운영 예산 등을 지원하고, 진흥원은 조경 및 그린인프라 관련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조경진흥원이 설치, 운영될 때까지 조경지원센터 내실화 및 활성화 추진

□ 기대효과

- 준공공기관 형태의 녹색복지 총괄기구로서 실효성 있는 조경진흥업무 수행
 - 국가 및 지역 조경정책 지원, 정책 제안 및 사업 발굴, 공공조경사업 선도 추진, 민간조경사업 지원 등
- 그린인프라 확충, 조경의 가치 확산, 조경산업의 기반 조성, 육성 발전 및 경쟁력 강화

세부사업 6-1-2.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참여 활성화

□ 배경과 필요성

- 수준 높은 조경 공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조경공간의 정책방향 설정, 기획, 자문, 조정애 필요한 총괄조경가의 참여와 제도화 추진 필요
 - * 우리나라의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는 민간전문가의 참여 규정(「건축기본법」)에 근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공건축 혁신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도입(2018년 10월 발표)

- 「조경진흥법」에 조경정책, 민간전문가 참여 등에 대한 규정 부재
- 건축분야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규정이 있고 발전적으로 제도화 추진

□ 실행방법

- 「조경진흥법」 개정을 통해 조경정책위원회(국가, 지방), 민간전문가 참여 규정을 신설하여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근거 마련
- 「조경진흥법」 개정과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부문 조경디자인 업무 기준’과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로 배포하는 등 제도화 추진

□ 기대효과

- 도시별 정체성 확보 및 국민 생활환경 개선, 궁극적으로는 고품격 국토환경 조성과 공간복지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실천과제 6-2.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재정 다각화

세부사업 6-2-1. 형평성을 고려한 공원·녹지 확충 지원

□ 배경과 필요성

- ‘공원녹지’는 대표적인 공공재로 국민이 일상생활권에서 체감하는 공간복지에 해당하며 국토환경 및 경관의 품격에 영향을 미침
 - * 헌법 제35조에 국민의 환경권 명시(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민의 환경권 보호,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 실행방법

-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공원녹지에 대한 국가 지원 제도 정비
 -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규정 신설 및 지원 관련 세부규정 보완
- 그린인프라 취약지역에 공원녹지 확충, 노후 도시공원 및 녹지 재조성 추진
 - 노후된 도시공원의 재조성(리모델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녹지(완충, 연결녹지) 개조 추진을 통한 그린인프라·탄소흡수원 확충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시특별회계 등 연계방안 모색
-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촉진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기능 유지
 - 지자체의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이자 지원 확대

□ 기대효과

- 지역별 공원녹지 불균형 해소 및 국민의 환경권 보호에 기여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토환경 조성,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세부사업 6-2-2. 재정 다각화 방안

□ 배경과 필요성

- 조경의 대상과 관련된 법률과 소관 부처가 다양하므로, 조경의 대상인 공원녹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조경진흥법」 소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서 전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

□ 실행방법

- 조경 관련 타 부처 시행사업과 협력방안 모색
 - 녹색성장 추진사업, 지역밀착형 생활SOC 추진사업, 농어촌뉴딜사업,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등
- 개발사업 관련 정부 부담금을 활용하여 추진
 - 국민의 환경권 보호, 생활환경 개선, 기후위기 대응,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목표 달성시까지 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공원녹지 조성·관리사업에 사용
- 특별회계 또는 기금 활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정부), 도시개발특별회계(지자체), 지방상생발전기금(지자체협의회)에서 공원녹지 조성·관리사업 추진
- 탄소중립위원회 및 정부부처 간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격체계 재구축 시에 조경분야와의 연계방안 검토 및 제안
 - * (예시) 특별지방세 항목에 녹지세 추가 검토 및 탄소중립 관련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
- 공원 내 세입 및 세출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및 추진
 - 공원 내 수익시설 및 시설의 유료화를 통해 공원운영관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민간기부금, 국민신탁제도 등 비영리성 민간자본 유치 및 활성화 방안 검토 및 추진
 -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운영에 민간자본 유치나 기부금 제도 등 활성화
 - *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민간에 의한 자원조달이 매우 취약. 민간자본 유치나 기부금 참여 제도 시스템 등 활성화 방안 모색 (기업의 사회공헌 및 ESG 경영, 국민신탁제도 등)

- 정부의 타 분야 기금을 활용한 공원녹지 조성사업 추진
 -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타 분야 정부 기금을 공원녹지자금으로 활용
 - * (예시) 정부의 복권사업수익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 모색
-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국민 참여 확대 및 재정지원 방안 검토 및 추진
 - *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공원운영은 효율성과 유연성, 기금모금, 한 공원에 집중할 수 있는 특성, 지역과의 긴밀한 유대, 리더십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재정적인 지원에 도움이 됨

□ 기대효과

-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한 공원녹지공간 확충
- 공원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비용 절감
- 조경분야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및 인식 제고

□ 배경 및 여건변화

- 공원녹지와 연관된 문화콘텐츠의 증가 추세
 - 도시와 공원 아카이브 전시, 숲과 식물을 주제로 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증가
-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조경공간 증가로 국민의 참여의식 증가
 - 단순관광에서 체험으로, 소극적 참여에서 적극적 기획제안으로 국민의 인식 전환
 - 전문가 인식조사에서 조경문화 대중화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 공원 조성 및 운영”을 최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 (62%)

□ 과제와 필요성

- 지자체별 공원녹지의 자료구축과 문화콘텐츠 연계
 - 기록과 기록에 대한 대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발굴과 확산
- 조경행정과 공간에 대한 다양한 평가제도 도입으로 질적 향상 유도
 - 민·관·전문가가 협업 가능한 제도 마련
- 공원녹지에 대한 관리운영에서 국민 참여방안 제도화 필요
 - 지속하여 예산이 필요한 관리·운영에 기업이나 시민과의 협업이 가능한 토대 마련

정책과제 7. 조경문화 확산과 국민소통 활성화

실천과제 7-1. 조경문화 확산

세부사업 7-1-1. 공원아카이브* 구축

* 공원아카이브는 공원에 대한 역사적 자료와 기록, 정보를 모아두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기록, 공원 설계가의 기록, 일반 국민의 기록 등 다양한 자료와 유형이 있다. 자료와 기록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관하는 기능을 넘어서, 공원 현황과 역사에 대해 일반 대중이나 연구자가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층위의 정보를 제공한다.

□ 배경과 필요성

- 도면이나 기록에 대한 아카이브 부재로 행정, 연구, 활용 면에서 어려움
- 아카이브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법과 제도 구축 동반
 -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2018년 제정), 의정부시 도시 문화역사자원 아카이브 구축 운영조례안(2020 의원 발의) 등

□ 실행방법

- 지자체별 공원 현황 조사 및 이슈 발굴
 - 면적, 조성연도, 시설 및 식재현황, 관리운영 현황 등의 목록화 사업 추진
- 주요 공원을 중심으로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시행
 - 역사·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공원, 노후화로 재조성 예정 공원, 도시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원 우선 시행
- 공원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 및 협업 네트워크 구축
 - 지속가능한 기록물 아카이빙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는 법 제도 마련

□ 기대효과

- 공원아카이브를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 생산하여 국민과 소통 확대
- 공공공간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작용하여 미래정책의 방향성 제시
- 조경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확산에 기여

세부사업 7-1-2. 우수 공원·녹지 및 조경시설물 시상 제도화

□ 배경과 필요성

- 조경의 가치를 알리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시상제도 필요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와 참여 기회 부재

□ 실행방법

- 공원녹지 평가에 대한 지침 마련, 수상 및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 중앙정부 차원의 공원행정 부분 시상제도 도입으로 창의적 사업 발굴
- 국민이 참여하는 우리동네 공원 시상제도 지원
- 우수 조경시설물에 대한 시상제도 운영
 - 녹색시설로 인증할 수 있는 조경시설물, 친환경 요소 및 스마트 기능을 보유한 우수 조경시설물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제도 운영

□ 기대효과

- 시상제도의 대중화로 조경에 대한 가치 인식 확산과 주인의식 향상
- 전시와 이벤트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콘텐츠로 활용

실천과제 7-2. 국민소통 활성화

세부사업 7-2-1. 주민참여 공원조성 및 운영

□ 배경과 필요성

-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자발적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방식이 활발한 추세
- 다양한 유형의 국민 참여가 가능한 법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추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 가능
- 공원의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 및 가능성 확인
 - * 서울숲컨서번시 성과 브랜드가치 공원1위, 민간재원확보액(521,122,000원)

□ 실행방법

- 국민 참여 제안사업 공모
 - 조성, 운영, 관리 등 과정상의 참여방식 다양화
- 지역커뮤니티와 연계한 공원 운영관리 지원
 -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가능 협업체계 구축
- 주민자치와 연계한 역량 강화 교육
 - 조성과 운영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 지원

□ 기대효과

- 조경을 매개로 한 커뮤니티 활성화 및 역량 강화
- 조경공간의 운영·관리에 대한 정부 예산 절감 및 도시공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세부사업 7-2-2. 생애주기별 조경 교육사업 추진

□ 배경과 필요성

- 도시의 자연이 다양한 정서적 문제와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 발표
- 도시에서 자연에 대한 관심과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실행방법

- 어린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태적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는 조경 교육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하계방학 조경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자율적 동아리 활동 지원
-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경 문화교실 개설
- 고령자 맞춤형 조경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제공
- 비대면 조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참여 및 녹색공간에 대한 관심 증진

□ 기대효과

- 생태계 보호,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자연친화적 생활 태도 확산
-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을 통해 자연과의 접촉 기회를 늘려 현대 도시환경에서 모든 세대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지원

정책과제 8. 조경 교육과 국제교류 지원

실천과제 8-1. 조경 교육 지원

세부사업 8-1-1. 전문인력 재교육 및 연수 지원

□ 배경과 필요성

- 기후변화, 회복탄력성, 생물다양성, 4차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조경전문가의 재교육 필요
- 공무원 대상 분야별 교육과정에 조경 교육 기회 포함 필요
- 미래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연수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조경설계 역량 강화

□ 실행방법

- 조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조경 실무자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토교통부 인재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인재개발원 등 교육과정에 조경행정 과정 또는 관련 과목 신설 유도
- 공무원 직무교육 프로그램으로 조경 및 그린인프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제공
- 미래형 조경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 연수 국비 지원

□ 기대효과

- 조경 분야에 대한 공무원 교육 과정을 통해 조경에 대한 인식 향상 및 공감대 형성
- 신진전문가에게 해외 조경정책, 조경문화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기회를 제공하여 조경 분야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세계적 수준의 조경전문가 양성에 기여
- 미래세대 국제전문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 교류로 연계

세부사업 8-1-2. 조경교육체계 합리화 지원

□ 배경과 필요성

- 학문으로서 조경에 대한 분류 영역이 기관별로 달라 정체성 모호
 - * 조경 전공 분야는 통계청(한국표준교육분류), 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기술표준분류, 전문위원 분야분류)의 교육·학문 분류체계에서 각기 다른 학문 분야로 분류
- 학문 분류에서 별도의 소분류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아 독자적 학문 성격이 드러나지 않음
 - * 졸업자수가 더 적은 패션디자인, 산업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등은 별도의 소분류 항목으로 존재

□ 실행방법

- 통계청 한국표준교육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분야분류 개선방안 연구 지원
- 아시아-태평양 IFLA와 협력하여 조경교육인증제를 공동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

□ 기대효과

- 학문분류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조경 분야의 학문적 전문성 확보 제도적 보장
- 조경 전문학위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조경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

실천과제 8-2. 국제협력과 교류 추진

세부사업 8-2-1. 조경비엔날레 및 박람회 개최

□ 배경과 필요성

- 기후위기, Covid-19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 국제적 연대를 통해 한국의 조경문화를 홍보하고 연계할 기회 필요
- 식물, 정원, 조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최근 전시의 소재와 주제로 부각되는 경향

□ 실행방법

- 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경비엔날레**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경박람회** 추진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같이 도시문화, 세계화 이슈에 대한 담론 형성의 장으로 기획
 - 지역 특색을 고려한 상생효과 도모, 우수 조경가의 해외 진출과 교육기회 제공
-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 제도 마련**
 -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 구상과 자료의 축적을 위한 법제도 구축

□ 기대효과

- 조경문화 확산과 산업 가치 증진 효과
- 신진 조경가 교육과 전문 조경작가 발굴
- 한국 조경문화 홍보와 교류의 장으로 활용

세부사업 8-2-2. 국제 회의 개최 및 교류 지원

□ 배경과 필요성

- 조경 분야 국제정책 동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할 기회 필요
- 한국의 공원녹지 정책 사례, 그린인프라 정책, 도시공원 사례 등 주요 정책과 사례를 국제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제리더십 강화에 긍정적 역할로 작용 가능

□ 실행방법

- **한중일 조경 심포지엄 개최**
 - 동아시아 3국이 격년으로 돌아가며 운영하는 국제교류 행사로 한국은 2023년 개최 예정
- **세계도시공원협회* 가입 및 세계도시공원 국제심포지엄** 개최**
 - * 세계도시공원협회는 도시공원 및 오픈스페이스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자문·지원하는 국제기구로, 향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확장하고 있음
 - ** '21년 일본에서 세계도시공원협회 가입 5주년을 기념하여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오픈스페이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 개최
 - 국제 대형도시공원상(International Large Urban Parks Award)*을 수상할 수 있도록 준비·신청
 - * 공원 설계 및 배치, 시설, 보호관리와 커뮤니티 참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따라 평가하여 시상. 2020년 미국 시카고 Millennium Park, 터키 이스탄불 Atatürk Urban Park 등이 은상 수상

□ 기대효과

- 국제 조경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의 조경정책, 대표 사례, 그린인프라 정책 등을 홍보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
- 조경 분야에서의 국제리더십 구축 및 국제협력기반 마련

VI. 실행계획

1. 추진주체 및 연차별 실행관리

□ 추진주체

- 세부사업별로 명시된 추진주체(주관부처, 협조부처)인 각 중앙행정 기관 및 소속기관

□ 연차별 실행 성과 조사 및 모니터링

- 국토교통부, 조경지원센터에서 연차별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를 검토하여 차기년도 사업에 보완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2022~2026년)
- 연차별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제3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추진방향 설정(2025~2026년)

2.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정책과제 1. 탄소흡수형 그린인프라 계획 지원

실천과제 및 세부사업	주관	협조	2022	2023	2024	2025	2026
1-1. 그린인프라 네트워킹 및 기능 향상							
1-1-1. 개발사업에서의 그린인프라 기능 제고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환경부	조사·연구	기획	시행	평가·시행	시행
1-1-2. 그린인프라 정보체계 통합 및 데이터 수집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원, 지자체	조사·연구	기획	시행	평가·시행	시행
1-2. 다기능 그린인프라 사업 지원							
1-2-1. 녹색시설 지원 기반 마련 및 시범 설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환경부, 지자체	조사·연구	기획	시행	평가·시행	시행
1-2-2. 탄소흡수형 그린인프라 조성 기술 연구 추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환경부	조사·연구	기획	시행	시행	시행

□ 정책과제 2. 도시공원 선도사업 추진

실천과제 및 세부사업	주관	협조	2022	2023	2024	2025	2026
2-1. 탄소중립형 공원녹지 조성 기반 마련							
2-1-1. 스마트 공원녹지 사업 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지자체	조사·연구	기획	시행	평가·시행	시행
2-1-2. 공원녹지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지자체	조사·연구	기획	시행	평가·시행	시행
2-2. 국가도시공원 조성 시범사업 기획							
2-2-1. 국가도시공원 시범사업 모델 기획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기획·연구	개정안 작성	개정안 발의	예산 신청	
2-2-2. 국가도시공원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지자체				공모 기획	공모 사업 추진

□ 정책과제 3. 공공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환경 개선

실천과제 및 세부사업	주관	협조	2022	2023	2024	2025	2026
3-1. 공정한 설계환경 조성							
3-1-1. 조경설계공모 제도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연구	연구	기획	시행	점검
3-1-2. 공정한 계약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연구	연구	기획	시행	점검
3-2.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발주 및 감리제도 개선							
3-2-1. 조경 감리제도의 합리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기획·연구	기획	기획	시행	점검·시행
3-2-2. 조경 발주제도의 합리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점검	기획·연구	기획	시행	점검·시행
3-2-3. 조경설계 자격 및 면허제도 추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연구	연구	연구	시행	점검

□ 정책과제 4. 조경 관련 녹색산업 기반 강화

실천과제 및 세부사업	주관	협조	2022	2023	2024	2025	2026
4-1. 조경 관련 산업 정보 체계화							
4-1-1. 조경산업 통계자료 구축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통계청	기획	연구	시행	시행	시행
4-1-2. BIM 연계 구축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기획	연구	시행	시행	시행
4-2. 녹색산업 기반 단지 및 시설 조성 지원							
4-2-1. 조경진흥단지 지원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조경지원센터,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연구	기획	시행	점검·보완	확대 시행
4-2-2. 첨단 조경진흥시설 지원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조경지원센터,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연구	기획	시행	점검·보완	확대 시행

□ 정책과제 5.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기반 마련

실천과제 및 세부사업	주관	협조	2022	2023	2024	2025	2026
5-1. 조경진흥법 실효성 강화							
5-1-1. 조경진흥법 개정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조경지원센터, 지자체	기획·연구	개정안 작성	개정안 발의		
5-1-2. 조경지원센터 활성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조경지원센터, 지자체	기획·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5-2. 생활SOC로서 공원·녹지 확충							
5-2-1. 공원·녹지 사각지대 해소(생활밀착형 공원 확충)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지자체	조사·연구	연구	기획	시행	점검·시행
5-2-2.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조경지원센터, 지자체	기획·연구	개정안 작성	개정안 발의		

□ 정책과제 6. 공공조경 기반 강화

실천과제 및 세부사업	주관	협조	2022	2023	2024	2025	2026
6-1. 공공조경 진흥을 위한 전문성 제고							
6-1-1. 녹색복지 총괄기구로서 조경진흥원 설립 추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기획재정부	조사·연구	연구	연구	기획	시행
6-1-2.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참여 활성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지자체	조사·연구	연구	기획	시행	점검·시행
6-2.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재정 다각화							
6-2-1. 형평성을 고려한 공원·녹지 확충 지원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조사·연구	연구	기획	시행	점검·시행
6-2-2. 재정 다각화 방안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기획재정부, 지자체	조사	연구	기획	시행	점검·시행

□ 정책과제 7. 조경문화 확산과 국민소통 활성화

실천과제 및 세부사업	주관	협조	2022	2023	2024	2025	2026
7-1. 조경문화 확산							
7-1-1. 공원아카이브 구축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지자체, 통계청	기획	연구	시행	시행	평가
7-1-2. 우수 공원·녹지 및 조경시설물 시상 제도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7-2. 국민소통 활성화							
7-2-1. 주민참여 공원 조성 및 운영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지자체	기획	시행	평가	시행	시행
7-2-2. 생애주기별 조경 교육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교육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기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정책과제 8. 조경 교육과 국제교류 지원

실천과제 및 세부사업	주관	협조	2022	2023	2024	2025	2026
8-1. 조경 교육 지원							
8-1-1. 전문인력 재교육 및 연수 지원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조경지원센터,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인사혁신처	기획	시행	시행	시행	시행
8-1-2. 조경교육체계 합리화 지원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통계청,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기획	연구		
8-2. 국제협력과 교류 추진							
8-2-1. 조경비엔날레 및 박람회 개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기획	시행	기획	시행
8-2-2. 국제 회의 개최 및 교류 지원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기획	시행	기획	시행	

3. 중점 실천과제 및 연도별 추진방안

추진전략	정책과제	실천과제	2022	2023	2024	2025	2026
I.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강화	1. 탄소흡수형 그린인프라 계획 지원	1-1. 그린인프라 네트워킹 및 기능 향상			시행	시행	시행
		1-2. 다기능 그린인프라 사업 지원			시행	시행	시행
	2. 도시공원 선도사업 추진	2-1. 탄소중립형 공원녹지 조성 기반 마련			시행	시행	시행
		2-2. 국가도시공원 조성 시범 사업 기획					시행
II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3. 공공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환경 개선	3-1. 공정한 설계환경 조성				시행	
		3-2.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발주 및 감리제도 개선				시행	시행
	4. 조경 관련 녹색산업 기반 강화	4-1. 조경 관련 산업 정보 체계화			시행	시행	시행
		4-2. 녹색산업 기반 단지 및 시설 조성 지원			시행		시행
III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도 정비	5.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기반 마련	5-1. 조경진흥법 실효성 강화		시행	시행	시행	시행
		5-2. 생활 SOC로서 공원·녹지 확충				시행	시행
	6. 공공조경 기반 강화	6-1. 공공조경 진흥을 위한 전문성 제고				시행	시행
		6-2.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재정 다각화				시행	시행
IV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	7. 조경문화 확산과 국민소통 활성화	7-1. 조경문화 확산		시행	시행	시행	시행
		7-2. 국민소통 활성화		시행	시행	시행	시행
	8. 조경 교육과 국제교류 지원	8-1. 조경 교육 지원			시행	시행	시행
		8-2. 국제협력과 교류 추진				시행	시행